

주요 내용

■ 페리보고서 발표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

주요 내용과 평가

- (내용) 한반도의 냉전체제 종식을 위한 3단계 목표 하에, 단기적으로는 핵·미사일 등의 대량 살상 무기 위협 해소에 초점
- (평가) 한미일 3국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북한의 페리안 거부 및 약속 불이행에 대한 대응책(red line) 부재라는 비판도 있음

의미와 시사점

- (의미)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계획서 성격의 지침서임. 때문에 정책 집행(policy)에 대한 구속력보다는 정책 개발 제안(proposal) 성격임
- (시사점) 한미일 공조 하에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한 대북 포용 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반도 정세 전망 및 남북 경협에의 영향

- (정치) 북한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미일의 대북 '선물'이 보다 구체화됨으로써, 한반도 주변의 긴장 분위기는 상당히 완화될 것임
- 그러나 북한의 通美封南 및 남한 당국자 배제 원칙으로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낙관은 아직 어려운 실정임
- (남북 경협) 북한 상품의 대미 수출 시장이 열림으로써 위탁가공 사업과 외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 사업이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섬유, 가전, 전자 등)

페리보고서 발표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홍 순 직

주요 내용과 평가

- (내용) 한반도의 냉전체제 종식을 위한 3단계 목표를 제시하였음
 - 제1단계(단기) : 한반도내 핵·미사일의 위협 해소 단계로서, 북한은 미사일 재발사를 자제하고,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 일부를 해제와 북미 연락사무소 등 초보수준의 외교 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 제2단계(중기) : 북미 및 북일 관계 개선 및 관계 정상화 단계로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믿을만한 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남북간에는 기본합의서 이행, 북일간에는 수교 협상의 본격화 및 일본의 대북 배상금 규모의 상향조정 등의 한미일 3국의 대북 관계 정상화 단계에 이름
 - 제3단계(장기) : 한반도 냉전체제 종식을 통한 남북한 평화 안정 체제 구축 단계로서, 북미 및 북일 관계는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발전하고 남북 관계는 사실상의 통합 상황인 남북 연합 단계로 발전
- (의미) 페리보고서는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계획서 성격임
 - 때문에 정책 집행(policy)에 대해 구속력을 갖기보다는 정책 개발을 위한 제안서(proposal) 성격이 강함
- (평가) 한미일은 페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북한의 거부 및 약속 불이행에 대한 대응책(red line) 부재라는 일부 비판도 있음
 - (한국) 김대통령의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방안'이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이산가족 문제 재회 문제 등 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데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현실적 정책 건의서로 평가)
 - (일본) 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실한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신중한 입장
 - (비판적 시각) 그러나 페리안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전체 속에, 낙관적 전망 위주의 중장기 계획이라는 일부의 비판적 의견도 있음

- 그러나 ① 금창리 핵협상-베를린 미사일 협상 타결의 화해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판단과 ②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강경책 발표로 미리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라, 채찍 성격의 대응책이 비공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페리 조정관은 조만간 북한이 발사 유예 선언(statement)을 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경제 제재 해제 조치를 거둬들이고 봉쇄(containment)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단언하였음(미 공보원의 기자 회견, 9. 22)
- 북한도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며 ‘신의있게 호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북미 고위급 회담 기간에는 미사일 재발사를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함(중앙통신·중앙방송, 백남순 외상의 UN총회 연설 등, 9. 21~9.25)

- (사사점) 한미일 공조 하에 보다 적극적인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 의지를 반영

- 미국의 대북 정책은 종래의 ‘현상 유지 정책’에서 벗어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에 의해 보다 빠른 속도(markedly faster rate)로 추진될 전망이다
- 페리보고서 골격은 북한과의 대립과 고립보다는 대량 살상 무기의 비확산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안정 정착을 위해 북한을 연착륙시키려는 데 맞추어져 있음
- 금창리 핵협상과 베를린 미사일 협상 타결로 그동안 발표가 지연되었던 페리보고서가 마침내 발표된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당근’ 위주의 포용정책임을 의미함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 (총괄) 북한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미일의 대북 ‘선물’ 제시로 한반도 주변의 긴장 분위기는 상당히 완화될 것임

-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를 위한 미일의 경제 지원책 제시는 북한의 경제적 실익 추구 자세와 맞물려, 북미 및 북일 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에 뚜렷한 성과가 기대
- 한미일 공조 강화 속에서도 각국의 입장에 따라 대북 경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다소 상이할 것이나, 북한의 협상 기간 동안의 재발사 중단 발표(9. 23)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일본도 조만간 대북 경제제재 해제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중단뿐 아니라 수출-생산-개발 문제와 연계하여 또다른 반대 급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실정임. 이는 2000년도의 한미일 선거에서 또다른 쟁점화 소지가 있으며, 특히 미국 대통령 선

-
- 거에서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에는 페리案의 수정론 혹은 무용론 대두 소지도 있음
- (北美)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를 위한 미국의 분위기 조성 노력이 가속화될 전망
 - 미국은 북미 미사일 회담 타결을 페리 권고안의 수용 조치로 평가하고, 포괄적인 대북 포용 정책에 보다 자신감을 갖고 구체적인 대북 지원책을 준비할 것임
 - 북한 역시, 2000년도 미국 大選에서의 공화당 집권 가능성과 일본의 재무장을 염려하는 중국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전망이다
 - (北日) 배상금 청구를 위해 북한은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일정한 노력이 예상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조치는 상징적 효과와는 달리 실제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만큼, 북한은 실리 확대면에서 북일 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임
 - 북한의 98년 대외 무역 14.4억 달러와 GDP 126억 달러를 감안하건대, 배상금(약 50~100억 달러)은 북한 경제를 최단기간 내에 회생시킬 수 있는 최대의 誘引으로 평가(식량 및 SOC 부문으로의 배상금 유입 → 북한의 산업 기반 회복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조치와 맞물려 서방국가들의 대북 투자 촉진)
 - 일본도 국내 여론을 의식하여 정부간 공식 접촉보다는 한미일 혹은 북일간 물밑 접촉을 통해 북한의 진의 파악에 주력할 것임
 - (南北) 한미일 공조 강화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할 것임
 - 정부는 ① 북미 미사일 회담이 성사된 점과 ② 남북 문제가 페리보고서에 포함된 점을 한미일 공조하에 우리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음
 - 이는 북한의 경제적 실익 추구 전략과 맞물려, 당국자 회담 성사 및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 협의를 위한 분위기 조성 작업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 것임(예컨대, 인도적 차원 및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한 지원책과 경협 지원책 제시 등)
 - 또한, 우리 정부는 페리案의 단계적 포괄 접근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대북 포괄적 일괄 타결案 기조도 함께 유지할 것임
 - 그러나, 북한의 通美封南 및 남한 당국자 배제의 이중적 접근 자세로 인해 남북
-

관계에는 단기간 내에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UN총회에서 백남순 북한 외상은 북미 및 북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표시했으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남한의 북한 변화 유도 정책 중단과 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

< 단계별 한반도 냉전 체제 종식 예상 흐름도 >

		제1단계(단기) →	→ 제2단계(중기) →	→ 제3단계(장기)
목표		북한 미사일 발사 중단	핵·미사일 개발 중단	한반도 냉전체제 종식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한 반 도 정 세 전 망	북미 · 북일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일부 해제, 식량 지원 -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 북미 고위급회담 및 미사일 전문가회담 등 - 북일 수교 협상 재개 - 남북 일본인 문제 해결	- 북미 불가침 협정 - 북미관계 개선 본격 논의 - 북한의 MTCR 가입 유도 - 북한의 국제금융기구(IMF, IBRD 등) 가입 지원 - 대북 농업 개발 지원 - 북일 무역대표부 설치 - 북일 배상금 지급 개시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전면 해제(대규모 원조 포함) -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 주한 미군 지위 변경 - 북미 및 북일 수교 - 북일 배상금 본격 지급
	남북	- 당국자 회담 개최 - 이산가족 문제 협의 개시 - 식량 및 경험지원책 제시	- 무역대표부 설치 - 투자 협력 확대	- 남북 평화협정 체결 - 군비 축소 - 남북 대표부 설치

남북 경협에 미치는 영향

- 북한 상품의 대미 수출 시장이 열림으로써, 설비 제공형 위탁가공 사업과 외국기업과의 합작 투자 사업이 활기를 띠 전망
- (교역) 저임에 의존한 임가공 및 설비제공형 위탁가공 사업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활기를 띠 전망이며, 정부의 후속적인 경협 지원책이 마련될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연계한 동반 진출 협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섬유, 가전, 전자 등)
- 특히, 국내 섬유업체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로 수 천만 달러의 추가 수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도 물류 비용 지원 등 중소기업 위주의 경협 사업에 장기 저리의 남북협력기금 지원 계획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투자) 대북 진출의 위험 분산 차원에서 서방 기업 및 교포 기업들은 남한 기업과의 합작에 의한 우회 형식으로 투자 사업을 다소 확대할 전망
- 금강산 관광사업의 외국인 관광 허용, 금강산 종합개발사업 및 서해안 공단 사업 등의 대북사업의 외자 유치에도 긍정적 효과기대

(sjhong@hri.co.kr ☎ 724-4051)